

북-EU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 북핵 사태 해결 이후를 중심으로 —

양장석* · 우상민**

- I. 머리말
- II. 북한-EU 관계의 역사
- III. 북한-EU간 경제 관계 현황
- IV. 북한-EU간 경제 관계 전망
- V. 정책적 제언

요 약

2·13 6자 회담의 타결로 북핵 사태의 해법이 마련되고, 북-미 실무자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북한의 대외 환경은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 성과는 EU와의 경제 관계 확대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북-일간 경제 관계 증진은 상징적인 의미는 크겠지만, 북핵문제 외에도 인권문제, 납치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EU와의 경제 관계를 확대하려 노력해 왔다. EU 또한 북한을 경제적,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올 정도로 북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고 있지 않다. 북핵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면, EU는 그동안 미루어 왔던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지원 확대는 북한의 산업 회생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고, 이는 북한과 EU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발하게 될 것이다. EU와 북한간의 경제 관계 확대는 그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북한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와 우호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우리나라 및 주변국 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이나 직접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동북아팀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동북아팀 연구원

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현재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개성공단의 입주를 망설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행에 대한 결심을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도 증가해 개성공단 개발에 활기를 더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간 경제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 개방, 인프라 건설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EU와 북한간 경제 관계 확대는 북한의 대외 개방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 활용할 필요가 있다.

I. 머리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향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한 6자회담의 2·13합의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이 아닌 국가들도 대북 지원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미국무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국가들이 어느 나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EU)과 호주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신문, 2007. 2. 24)

“유럽연합(EU)은 6자 회담 타결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결정을 지지하는 뜻에서 조만간 이른바 ‘유럽연합 트로이카’¹⁾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독일 주재 유럽연합 순회의장국 사무소가 15일 밝혔다.”(한겨레신문, 2007. 2. 16)

EU는 이번 2·13 타결 결과에 대해 6자

회담의 당사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6자 회담의 타결로 북한과 EU간 경제 관계는 에너지·경제·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로 주춤했던 대북 지원이 늘어나고, 무역 및 투자 관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전통적으로 북한문제와 한반도의 정치·안보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로 봤을 때, EU는 북한의 3대 교역 파트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으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볼 때, 몇몇 EU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북 투자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유럽연합 트로이카는 순회의장국인 독일과 차기 의장국인 포르투갈, 하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담당 집행위원을 말함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서 미·중·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EU는 북한을 경제적, 인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일본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EU와의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2.13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치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대외 경제 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의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소고는 북한과 EU간 경제 관계 현황을 무역, 투자, 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6자회담 타결로 양 지역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지 전망하고자 한다.

II. 북한 - EU 관계의 역사

1990년대 접어들면서 소련을 비롯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하자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다. 그 결과 외부 자원 공급이 줄어들고, 생산 시설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여기에 1995년, 1996년 연속으로 심한 홍수를 겪으면서 식량난도 가중되어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고, 결국 국제사회의 원조가 절실하였다. 이에 북한은 미국, 일본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작고,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술의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EU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EU는 1990년대 초 동아시아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아시아 지역과의 양자 관계 확대를 대외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교류 강화와 정치 분야 협력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4년 EU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²⁾하고, 지역분쟁과 안보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EU의 아시아 전략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EU는 북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2) 아시아지역에서의 EU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강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EU가 설정한 주요 목표는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양자관계 증대, ▲ASEAN 등과 같은 지역공동체 강화를 통한 지역안보 환경의 조성, ▲유럽의 투자 및 무역 확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규제완화와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시장자유화의 촉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지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은 과거의 수동적인 정책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전략을 채택하고 정치·경제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베트남 등과 같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확대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KIEP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북한-EU간 관계 증진

일 자	북한-EU 관계 증진 내용
1998. 12	제1차 북한-EU 고위급 회담
1999. 7	EU 이사회(COUNCIL) 결정에서 대북 관계에 대한 청사진 제시
1999. 11	제2차 북한-EU 고위급 회담
2000. 6	남북정상회담 지지 선언
2000. 10	EU 이사회(COUNCIL)에서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통합적 접근 정책 시도를 결정
2000. 12	제3차 북한-EU 고위급 회담
2001. 3	EU 이사회(COUNCIL)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EU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
2001. 5. 2	유럽연합의장국인 페르손 총리의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2001. 5. 14	북한-EU간 외교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도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EU는 1995년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해 1996년 식량원조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점차 늘려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KEDO 운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KEDO 지원국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고난의 행군 시작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긴급구호를 요청하게 된 점과 1994년 EU가 아시아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전략(Towards New Asia Strategy)을 채택한 것이 맞물려 북한과 EU간의 경제 관계는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외교적 고립상태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경제회생

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1990년대 후반기부터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시작, 2000년을 '외교 원년'으로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러시아, 중국과 같은 전통적 우호국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EU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썼다. EU도 한반도 문제 개입에 따른 대북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대외 개방에 일조하려던 참이었기에 북한과의 정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북한과 EU의 관계 발전에 추진제 역할을 하였다. 6.15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은 대외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고, EU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 EU는 2000년 10월 9일과 11월 20일에 개최된 이사회

의 결정을 통해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정책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1년 3월 23일과 24일 이사회에서 한반도의 평화, 안보,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EU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2001년 5월 2일 서방정상으로서 처음으로 유럽연합의장국인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이끄는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으며 5월 14일 유럽 집행위가 북한-EU 간 수교를 결정함으로써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외교 관계 수립으로 양자간 경제 관계는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³⁾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북한 핵문제가 돌출되면서 EU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2002년 11월 EU 각료 이사회에서는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EU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로써 2002년 6월 평양에서 북한-EU간 정치대화가 있는 후 현재까지 정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급진전되었던 북한-EU

간의 관계는 더 이상 개선될 수 없었다.

EU회원국과 개별적으로는 2000년 2월 4일 이탈리아와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후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잇따라 9개국과 수교를 맺었다. 현재 북한은 27개 EU 회원국 중 프랑스,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과 수교한 가운데, 프랑스와의 수교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규 12개 회원국⁴⁾들 중 구 동구권 국가들과도 교역 확대 등 협력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III. 북한과 EU간 경제 관계 현황

1. 무역 관계

북한의 제3대 교역 파트너로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EU와 북한간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 관계 개선에 따라 점차 증가하던 교역량이 2002년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5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다시

3) 예를 들면 북한은 2001년 4월 네덜란드와 “무역·경제분야에서의 쌍무적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4월 스웨덴과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0년 이후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북한에 경제 사절단을 보내어 에너지, 기계공업, 운송, 통신, 식품가공, 농업분야 등 경제협력가능한 부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북한 또한 유럽지역에 경제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국제 상품 전시회에 참가하여 북한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과 유럽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2004. 3., KIEP 세계경제, KIEP

4) 신규 EU 회원국: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몰타, 키프로스(2004. 5), 루마니아, 불가리아(2007. 1)

북한-EU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수 출		수 입		합 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04	86,907	-	174,307	-	261,214	-
2005	91,158	4.9	200,978	15.3	292,136	11.8
2006(1~11)	59,452	-28.9	156,356	-16.3	215,808	-20.2

자료: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WTA

주: 2007년 신규가입국인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제외한 25개국 기준

감소세로 돌아섰다.

2004년 5월 EU의 동진으로 신규로 10개국이 가입하면서 그 전의 교역액과는 유의미한 비교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2004년부터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2006년 교역 규모의 감소는 그간 북한과 EU간의 관계 개선 노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AFP 통신에 따르면 EU 25개 회원국 각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무기와 사치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EU회원국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실시되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인물 및 이들 가족의 EU 내 입국도 제한하였다. EU는 6자회담의 당사국이 아님에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라 북-EU간 교역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EU와의 교역에서 천만 달러 정도

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어패류는 장거리 수송에 애로사항이 있는 데다, 수출 증대를 위한 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EU로부터의 수입에 맞먹을 정도의 수출품을 생산하기 어려워 EU에 대한 적자 구조는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EU 회원국 중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는 독일로 나타났다으며,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들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나, 나머지 EU 회원국들과의 교역은 지속적인 추세를 찾아보기 힘들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북한은 EU 회원국에게 섬유제품, 광물성 생산품, 기계류, 비금속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기계류, 비철금속, 차량, 광학 정밀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몇몇 주요 교역국을 제외하고는 일관

북한의 對EU회원국별 교역 현황

단위: 천 달러, %

국가	북한의 수출		북한의 수입		수출입계		점유율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독 일	22,630	14,698	68,563	62,069	91,193	76,767	34.9	26.3
네 덜 란 드	8,270	6,782	10,549	35,451	18,819	42,233	7.2	14.5
프 랑 스	27,090	30,042	6,620	7,564	33,710	37,606	12.9	12.9
스 웨 덴	244	337	28,384	34,499	28,628	34,836	11.0	11.9
폴 란 드	2,698	17,490	1,749	4,053	4,447	21,543	1.7	7.4
스 페 인	4,477	7,364	8,639	9,483	13,116	16,847	5.0	5.8
덴 마 크	2,089	1,812	11,216	11,099	13,305	12,911	5.1	4.4
벨 지 움	4,838	1,860	17,070	11,034	21,908	12,894	8.4	4.4
이 탈 리 아	3,895	689	10,804	11,863	14,699	12,552	5.6	4.3
아 일 랜 드	0	5,161	0	283	0	5,444	0.0	1.9
슬로바키아	420	45	685	4,893	1,105	4,938	0.4	1.7
핀 란 드	6	2	133	2,773	139	2,775	0.1	0.9
오스트리아	1,304	665	5,366	1,985	6,670	2,650	2.6	0.9
영 국	747	1,842	419	515	1,166	2,357	0.4	0.8
그 리 스	2,691	879	483	1,257	3,174	2,136	1.2	0.7
슬로베니아	1,883	235	996	1,290	2,879	1,525	1.1	0.5
체 코	2,547	322	2,195	369	4,742	691	1.8	0.2
사이프러스	0	500	0	0	0	500	0.0	0.2
헝 가 리	405	270	370	184	775	454	0.3	0.2
포 르 투 갈	87	63	42	313	129	376	0.0	0.1
몰 타	0	49	0	0	0	49	0.0	0.0
리투아니아	81	34	2	0	83	34	0.0	0.0
룩셈부르크	37	16	16	1	53	17	0.0	0.0
에스토니아	468	1	6	0	474	1	0.2	0.0
라 트 비 아	0	0	0	0	0	0	0.0	0.0
합 계	86,907	91,158	174,307	200,978	261,214	292,136	100.0	100.0

자료: KOTRA 해외무역관 보고

된 수출입 구조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05년 북한의 7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한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기계류 수입이 전년대비 317.3%로 급증하였고, 2004년까지 수입이 전무하였던 낙농품과 육류가 신규

수입되었다.

북한이 EU로부터 기계류 수입이 가장 많은 이유는 구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이후 산업분야의 생산능력을 일정 수준으로 지속하기 위해 EU를 새로운 기계류 공급원

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EU로부터의 기계류 도입을 살펴보면, 특수기계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공업 기계, 차량, 금속공작기계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對 EU 주요 수출품으로는 노동집약적인 제품들과 자원집약적인 제품들인데, 섬유 및 의류 제품, 광물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목들로 나타나 여전히 노동력과 부존자원에 비교우위가 있음을 보여준다.

2. 투자 관계

최근 수년에 걸쳐 북한 진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유럽 기업들은 상당수 있으나, 실제 북한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유럽 기업들의 북한 진출이 부진한 이유는 북한이 지난 1970년대 대외채무를 디폴트한 바 있고 투자 리스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미비한 등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이 추진한 라진선봉특구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었다. 1994년 10월 북·미간 제네바 합의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어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었고,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일성 유훈사업이라는 위상

하에 라진선봉특구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방 자본들도 라진선봉특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5년 2월 GM, MCI, 인터내셔널, US 워싱턴은행, 스탠튼 그룹 등 11개 기업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이 라진선봉을 시찰한 것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결국 1995년 영국의 원유가공 회사인 로얄더치셀이, 1996년 네덜란드의 ING베어링이 라진선봉특구로 진출했다. 그러나 1997년 중반 이후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유럽 기업들의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져 유럽 기업의 라진선봉진출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북한의 외자 유치 현황에 대한 공식적 통계가 미비하며, 투자 계약이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유럽 기업의 대북 투자 진출을 정확하게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각종 언론을 통해 최근 유럽 기업의 대북 투자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 사례를 통해 유럽 기업의 대북 투자 유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미개척 시장인 만큼 북한에 대한 투자는 선점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인프라, 지하자원 등을 선점하려는 투자이다. 과거 중국과 일본 조총련 계의 소규모 투자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이다. 위 사례 중 스웨덴-스위스 합작

유럽기업의 대북 투자 진출 사례

국 가	분 야	규 모	계약/ 보도시기	내 용
독 일	인터넷 서비스	530천 파운드	미상	베를린 소재 컴퓨터 회사인 KCC Europe은 북한의 온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30천 파운드를 투자
프 랑 스	화학 및 광업	12백만 유로	미상	주로 화학 및 광산 관련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자제한 통계나 투자업체명은 외부에는 비공개로 하고 있음
	애니메이션 하청생산	미상	미상	1985년부터 프랑스 애니메이션제작업체는 SEK Studio (조선4.26 아동영화촬영소)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수 차례 맺었음 Becassine(주: 1950년대 프랑스에서 유행한 유명 만화 캐릭터)을 비롯해 유명 애니메이션 여러 편을 제작하였음
	전화교환기	미상	1999년	알카텔사는 1999년 말 북한 내 전화교환기 시스템 교체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짐
영 국	담배제조	7.1백만불 이상	2001년	2001년 북한국영기업 석용 무역과 합작, 710만 불을 투자하여 지난 4년간 북한에 비밀리에 담배제조공장을 운영 200명의 근로자를 채용, 연 20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05.10.17일자 영국 Guardian Daily 보도)
	유정개발	미상	2004년	Britain's Aminex PLC와 북한 당국은 원유산업 20년 협약을 체결 협정내용은 Aminex가 소규모의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하고 유정개발에 성공할 경우 생산되는 탄화수소에 대한 로열티를 북한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금융	미상	2005년	런던 소재 앵글로 지노 캐피탈은 북한에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펀드 조성을 통해 주로 북한의 광산, 광물 등의 개발을 통해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밝힘 동사는 런던 금융 감독청에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홍콩, 베이징, 서울 등에서 '조선 펀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중
	컨설팅	미상	2006년	영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KBC(Korea Business Consulting)사는 잠재가능성이 큰 이머징 마켓을 찾고 있는 세계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0여 년간 북한과의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2006년 에는 평양에 지사를 설립하였음
스 웨 덴 스 위 스	발전/송전	미상	2000년	스웨덴-스위스 합작의 다국적 기업인 ABB(Asea Brown Boveil)사는 2000년 11월 방북하여 북한 급속기계공업성 및 전기석탄공업성과 북한 내 배전망을 현대화한다는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현대화 협조 합의서'를 체결 또한 전기 설비와 발전 설비 및 산업 설비 개선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합의

국 가	분 야	규 모	계약/ 보도시기	내 용
네덜란드	금융	미상	1996년	네덜란드의 ING은행이 1996년 북한조선국제보험사와 합영으로 ING 동북아시아 은행을 설립 이는 유럽국가 중 최초로 나진선봉자유무역지역에 지점을 개설한 사례 그러나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이 지연되고 경영상의 부진이 겹치면서 1999년 4월 철수
	발전	8,700만 달러	1998년	네덜란드의 Wartsila사는 1998년 9월 나진선봉 투자 상담회에서 선봉발전소 증설 투자를 위해 총액 8,7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약을 체결 이 회사는 1998년 5월에는 9.6MW 발전기용 엔진 2기와 북한산 고철을 바터로 교역기로 합의
벨 기 에	다이아몬드 가공	미상	미상	벨기에 안트워프 소재 인터젬스클래스(Inter Gems Claes)사와 북한 대송무역과 합작 동사는 다이아몬드 원석 가공회사 북한과 벨기에와의 무역통계를 볼 때 벨기에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북한에 수출하고 가공된 원석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동 분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반면 벨기에와 북한간의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가 최근 몇 년간 전무한 것으로 볼 때 그동안 벨기에 투자회사가 철수했거나 투자자본금을 회수한 것으로 짐작됨
스 위 스	의약	2백만 유로	2004년	2004년 초 Interpacific Holding사는 북한의 평양 제약사(Pyongyang Pharmaceutical Factory)와 공동으로 평스 제약 협력회사(PyongSu Pharma J.V. Co. Ltd)를 설립 북한 측은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했고, Interpacific은 기계 및 설비를 제공 Interpacific Holding(Interpharma Asia Pacific)사는 자사인 Pharma Industries, PharmaLink와 Zuellig Pharma를 통해 아태지역 제약시장에 생산부터 마케팅, 운송, 유통, 판매망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임 이 회사는 아태지역 제약시장에서 60년이 넘는 경험을 쌓아 온 회사로 평스 제약회사에 단순 기계, 설비 제공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까지도 제공하고 있음 평스 제약 협력회사는 현재 '평스 스피린' 등 자체 브랜드의 진통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페니실린을 제외한 항생제 생산을 계획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자체브랜드 생산보다는 북한진출을 계획하는 제약회사들로부터 수주를 받아 생산하는 OEM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피아노제작	미상	2002년	'네메츠케(J. Nemetschke)'사는 북한의 '평양 피아노 공장'과 합작하여 피아노를 생산하고 있음 북한산 혹은 중국 동북지역의 기문비나무, 단풍나무의 품질이 우수하여 북한에서 피아노 외장을 생산하고 있음

자료: 각종 언론 보도 종합

다국적 기업인 ABB사의 북한 내 배전망 현대화 사업 투자나, 네덜란드의 Wartsila사의 선봉발전소 증설 투자, KCC Europe의 북한 인터넷 서비스 관련 투자의 경우 북한 인프라 관련 투자에 해당한다. ING의 나진선봉특구에 대한 투자도 북한의 첫 경제 특구에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지하자원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투자 사례는 Britain's Aminex PLC의 유정개발 관련 투자를 들 수 있다. 최근 중국의 대북 투자가 급증하면서, 무연탄 등 지하자원 개발 투자와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건설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관련 투자의 대부분은 서방 자본의 몫이었고, 그 중에서도 유럽 기업의 투자가 많았다. 이는 유럽 기업이 북한을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시장이면서, 주변 지역에 중국 등의 거대한 시장을 두고 있는 미개척의 땅으로 보고, 투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투자이다. 벨기에의 인터잼스클래스사가

다이아몬드 원석을 위탁 가공하기 위한 투자나,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사가 피아노 제작 관련 투자를 진행한 것⁵⁾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북한이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한 국가로 유럽에도 잘 알려져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유럽 기업이 북한의 투자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인식은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접촉한 몇몇 유럽기업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까지 북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와 스위스의 Interpacific Holding사를 접촉한 결과 북한의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당초 계획했던 투자 계획을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북한의 '평양 피아노 공장'과 협력하여 피아노를 생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네메츠케사에 따르면, 당초 피아노 생산의 모든 공정을 북한에서 진행하려던 계획에서 현재는 피아노 주형틀, 공명판 등의 외관만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건반 및 기계 장치는 여전히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북한과는 '위험한 곡예'와

5) 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1천대 이상의 피아노를 생산하여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이 회사는 1970년대 들어 증가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생산을 축소하여 최종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생산을 중단하였다. 이후 새로 사장으로 취임한 Johann Nemetschke에 의해 오스트리아에서의 생산 재개를 위한 다양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고, 저렴한 생산 비용의 합작 파트너를 모색하던 중 2002년 마침내 북한의 "평양 피아노 공장"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평양의 숨결을 간직한 비엔나 피아노, 2006. 1. 3, KOTRA 북한경제속보

같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평양에서 완성품 생산이 불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Johann Nemetschke 사장은 “피아노의 음질을 보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서방국가와는 전혀 다른 나라인 북한에서의 기술 이전 과정상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창의력, 응용력 등이 부족하여 보조 작업의 경우에도 일일이 교육해야 하며, 반드시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빈번한 정전 사고, 필요한 정보를 요구했을 때 답신이 평균 3주 이상 걸리는 점 등 서구식 기업사고 및 상업적 마인드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⁶⁾

Inferpacific Holding사가 북한의 평양 제약사(Pyongyang Pharmaceutical Factory)와 공동으로 설립한 평스 제약 협회회사(PyongSu Pharma J.V. Co. Ltd)는 2004년 9월 처음으로 진통제를 생산하고 현재 소량의 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스의 스위스인 사장 펠릭스 아프트(Felix Abt) 씨는 현재 북한 생산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에 대해 “대량 생산에 필요한 GMP

(Goods Manufacturing Practice)⁷⁾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 당국은 여러 차례 GMP인증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소한 조건을 문제 삼아 GMP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GMP 인증은 생산 제품을 북한 내 국제 원조 기구에 공급하거나 해외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평스 제약 협회사는 당초 국제 원조 기구와 북한에 진출하려는 제약회사에 OEM 계약을 통해 대량생산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렇지만 미개척 시장으로서, 그리고 저렴한 동북아 생산 거점으로서 북한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는 서방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영국의 한 펀드 매니저는 ‘투자 리스트가 큰 만큼 이에 걸맞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지노 캐피탈이 북한에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조선개발투자펀드’를 조성하려는 계획이나, KBC(Korea Business Consulting)사가 2006년 평양에 지사를 설립, 잠재가능성이 큰 이머징마켓을 찾고 있는 세계 투자자들에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도 EU

6) 평양의 습격을 간직한 비엔나 피아노, 2006. 1. 3, KOTRA 북한경제속보

7)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약품의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이르러 지켜야 할 규범을 말한다. 현대화·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GMP 제도는 미국이 1963년 제정하여, 1964년 처음으로 실시한 데 이어 1968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그 제정을 결의하여 이듬해 각국에 권고하였다.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의 투자 환경 개선인 것이다.

3. 원조 관계

EU 집행위와 회원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이 가장 심각하였던 199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집계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까지 10년간 약 4억 3,800만 유로를 제공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⁸⁾ 인도적 지원은 2005년 13.715백만 유로, 2006년 8백만 유로가 추가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⁹⁾ EU의 대북 지원은 식량 지원의 경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경우 개

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98년 이래 EU 집행위(Commission)가 이의 수송과 전달을 담당함으로써 대북 지원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U의 대북 지원정책은 기술적 지원,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등 3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은 1990년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왔지만, 기술적 지원은 현재 보류 상태이다

EU가 1995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경으로는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긴급 구호 요청과 함께 EU 집행위가 아시아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 EU의 새로운 전략(Towards

EU의 대북 경제지원 현황(1995-2004)

단위: 백만 유로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인도적지원 (ECHO)	0.29	0.5	19.7	4.7	4.8	8.05	3.365	21.025	17.25	10.2	86.88
식량지원 · 농업재건	-	-	57.9	55.2	30	25.3	24.5	20	8	8	228.9
NGO와의 협력사업	-	-	-	-	-	-	-	0.75	0.75	-	1.5
소 계	0.29	0.5	77.6	59.9	34.8	33.35	27.865	41.775	26	18.2	320.28
기술지원	-	-	-	-	-	-	2(유보)	-	-	-	2(유보)
K E D O	-	15	15	15	15	15	20	20	1.3	-	116.3
합 계	0.29	15.5	92.6	74.9	49.8	48.35	49.865	61.775	27.3	18.2	438.58

자료: 주한 EU대표부

8) 주한 EU 대표부

9) DG for Humanitarian Aid - ECHO Financial Report 2006

New Asia Strategy)채택을 꿈꿀 수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KEDO 사업에 대한 EU의 자금 제공 또한 이러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모색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⁰⁾

1995년 10월 유럽인도지원사무국(ECHO)의 긴급구호물자 전달로 시작된 EU의 대북 지원은 1997년 식량지원과 농업재건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에 접어들면서 북한과 EU의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EU의 대북 지원은 2002년 EU 집행위가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2004」(이하 CSP)와 이의 후속조치인 「National Indicative Programme 2002-2004 DPRK」(이하 NIP)를 승인, 발표하면서 체계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CSP와 NIP의 주요 내용은 EU의 대북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시장경제 원리 교육 및 지속 가능한 관리 능력 배양, 북한 천연 자원의 효율성 제고, 제도적 지원 및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기술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에 머물렀던 EU의 대북 지원이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과 자금지원 프로그램 추진으로 전환되고 이를 바탕으로

EU와 북한간 무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발생하고,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CSP와 NIP의 추진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EU는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을 북한의 안보문제와 철저히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중단하지 않고 있다.¹¹⁾ 또한 공식적인 차원에서 CSP와 NIP가 이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EU는 평양에 사무소를 개설한 NGO를 통해 1990년대 후반기에 보였던 단순 식량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체 식량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분야의 기술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부문 지원에는 농자재 공급, 농경지 및 제방복구, 수로 및 하천 개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2004년 1월 주간 EU 상공회의소가 유럽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북한 기업의 유럽 수출 지원, 경제실무와 관련한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조선-유럽 경제기술협력 센터(Korea-Europe Technology & Economy Service)'를 평양에 개설하였으며, 유럽-코리아 재단(Europe-Korea Foun-

10)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KIEP

11) 지난해 말에도 EU 집행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원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 2007년 대북 지원 예산으로 8백만 유로(한화 약 96억원)를 책정하였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2006. 12. 5

dation)과 협력하여 평양에서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유럽 소재 대학 및 기업에 관계자를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²⁾ 또한 스위스 개발협력기구(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의 재정지원으로 북한에 최초로 설립된 경영전문학교인 평양 비즈니스 스쿨이 운영되어 국제상법과 전략경영론 등을 북한에 진출한 서구기업 및 외국 은행 종사자가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¹³⁾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정부산하 구호·개발 기구들 또한 대북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스위스 외무성 산하의 개발협력기구(Swiss Agency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¹⁴⁾이다. 동 기구는 북한 농업 개발을 위해 연간 4백 5십만 스위스프랑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작 방법 개선 및 교육 등을 통해 북한 내 생산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IV. 북한과 EU간 경제 관계 전망

2·13 6자 회담의 타결로 북핵 사태는 일

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과 나머지 5개국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북-미 실무자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점이 시사하듯 올 해는 북한의 대외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사태의 원만한 해결은 북한과 EU간의 관계 증진에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EU는 현재 대북 관계 증진의 목적을 북한의 대외개방에 기여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경제적 실리 추구 차원에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EU가 지원 요청 및 협력 대상으로서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인권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같은 각종 현안들로 미국, 일본과는 충돌할 가능성이 커 EU 국가와의 경제지원과 교류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¹⁵⁾

북한과 EU지역과의 경제 관계는 북핵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면 EU의 본격적인

12) 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 국제세미나(Roundtable for Knowledge Cooperation with the DPRK, 2004. 2. 13)에서 발표된 유럽-코리아 재단 Susana Miradadml의 "The Europe-Korea Foundation Training Activities in the DPRK"와 조선-유럽경제기술협력센터의 홈페이지(<http://ketes.org>) 참조

13) 조선일보, 2005. 8. 20

14)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 북한이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북한 내 스위스 자선단체들이 모두 철수한 이후 스위스 개발협력기구만이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www.news.ch

15)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KIEP 참조

NIP 기술지원사업(2002~2004)

단위: 만 유로

사 업	예산액	내 용
제도적 지원과 역량 구축	700	- EU 교육시찰 - 국제금융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정부 관리 교육
지속 가능한 관리 및 천연 자원 활용	300	- 지속 가능한 에너지 부문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 - 에너지 생산 및 효율성 제고
자생력 있는 농촌 개발	500	- 자생력 있는 농촌 개발을 위해 전문 기술 전수 - 수자원 관리 및 토질 개선

자료: NIP

개발 원조 실행과 함께 유럽 기업의 대북 교역 증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대외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 EU지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 형태를 넘어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할 경우 북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무부 관계자가 밝혔듯이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향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2·13합의와 관련,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도 대북 지원을 시작할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는 EU 회원국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U가 대북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면 2002년 3월 EU 집행위가 승인하였으나 북핵문제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CSP와 NIP에서 설정한 대북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EU의 대북

협력 방안을 규정한 두건의 보고서에서는 EU가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도적 원조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술지원 및 경제개발 프로그램의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 경제 교육, 에너지 부문 재건,¹⁶⁾ 운송설비의 현대화, 농촌지역 개발 등과 같은 경제 회복 및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행 사업들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경우 EU 회원국들의 경제지원 규모와 종류는 확대될 것이다. 중장기 전략대로 EU 회원국들이 대북 경제 지원을 실시한다면, 이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경제 성장 토대 마련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¹⁷⁾

16) 유럽집행위는 북한이 대규모 투자비용 없이도 에너지 부문의 효율성을 25~35% 가량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한다. EU's Policy Toward the DPRK-Engagement or Standstill, Axel Berkofsky, 2003. 8

17) 북한·EU 경제관계의 확대 현황과 향후 전망, 이종운, KIEP 세계경제 2004. 3 참조

북한 관료 및 전문가의 유럽 연수·방문 사례

년도	기간	참가자 수	장소·주관단체	내 용
1997	3주간	경제 분야 전문가 27명	Central Unison University (헝가리 부다페스트)	- 국제금융 현황 교육
	6주간	공보분야 외교관	CASIN(Center for Applied Studies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스위스	- 1차 외교관 전문연수 프로그램 - 북한 외무성 요청과 스위스 개발 청 후원
1998	6주간	공보분야 외교관	CASIN	- 2차 외교관 전문연수 프로그램 - 국제기구와 관련한 주제를 추가
1999	2주간 (7월)	농업성, 농업연구센터 관계자 4명	농식물 연구소 (NIAB) (영국, 케임브리지)	- World Vision Int'l의 후원에 의함
2000	6주간	공보분야 외교관	CASIN	- 인권과 관련한 주제, 인터넷과 언론의 역할을 추가
2001	3월	농업성 대표 8명	네덜란드	- 고구마 가공공장건립을 위한 기 자재 수입을 위한 사전 교섭
	4월	북한 대학생 4명	독일, 호주	- 시장 경제와 운용 관련 연수
	2월	김봉익 무역성 차관, 천리 마자동차공장 관계자	이탈리아 상무부	- 투자에 대한 협의
	7주간 (3월)	'Voice of Korea' 관계자 2명	독일 International Institute for Journalism	- Adenauer Stiftung후원
	9월 19-24일	김영재 무역성 차관을 대 표로 한 경제사절단 15명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 북한 투자 설명회 - 북한 기술 인력에 대한 연수지원 의사 표명
	10월	김일성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스톡홀름 경영대학,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스웨덴 정부, 의회 방문 - ABB, Ericsson 방문
2002	2월 20-27일	경제사절단	핀란드, 스웨덴	- 철강 및 비철금속 관련 산업체 방문(SCANIA, 특수철강 및 굴 착장비 대기업)
	3월 3-16일	리광근 무역성 부상외 경제 대표단 12명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스톡홀름 상파대학, Nordea Bank, SCANIA),	- EU경제·국제경제현황 시찰, 협 력방안 논의
	4월 22-24일	무역성과 무역회사 대표 등 22명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	- 중고기기 박람회 참가
	2주간 (8월)	정부 공무원, 학자	스톡홀름 경영대학, European Institute of Japanese Studies	- 시장경제와 국제무역에 대한 연수

년도	기간	참가자 수	장소 · 주관단체	내용
2003	5주간 (8월-9월)	중견 공무원 12명, 고위 공무원 11명, IT분야 전문가 3명	CASIN	- 6차 외교관 전문연수 프로그램 - 개발, 국제 협력, 국제법, 시장경제 와 관련한 주제 포함
	10월 20-22일	무역은행, 경제부처 등 관계자 9명	Landau Network-Centro Vlota(이탈리아, Como)	- 북한의 경제회복과 유럽과의 협 력에 대한 국제세미나
2004	8월 23일- 10월 1일	외무성, 경공업성, 무역 성, 큰물피해대책위원회 관리 14명	CASIN	- 시장경제, 국제무역과 통상외교, 경제개혁과정
2005	9월 5-30일	외무성, 무역성, 경공업성, 현직 공무원	CASIN	- 다자 외교와 시장경제
		행정부처 관리	영국 Warwick대학 등 고등교 육기관	- 2002년 이후 영국의 교육기관에 매년 10여명의 공무원 연수를 진 행

자료: Park, Jin and Seung-Ho Jung. 2004. "Knowledg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valuation and Strategies," KDI국제정책대학원 주최 국제세미나(Roundtable for Knowledge Cooperation with the DPRK, 2004년 2월 13일) 발표 논문. p. 44-52.

또한 CSP에서는 교육 사업에도 초점을 두고 있는데, 북한 정부 관료와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경제정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전수 받을 수 있다. EU가 지원하는 다각적인 시장경제 교육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북한의 전문 관료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1경제개선조치'의 배경을 분석한 논문들에서 1990년대 하반기 이후 서방국가에 파견된 경제시찰단, 정부관료, 경제전문가들이 귀국하면서 북한의 최근 정책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은 시장경제 교육프로

그램이 북한의 경제운영방식에 대한 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한다. 또한 CSP하 교육 사업은 국제회계기준, 국제법, 금융 및 무역시스템, 외국인 투자 등과 같은 북한경제의 세계시장 참여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인 지식도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EU의 대북 경제 지원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 무상지원환산율이 높은 양허성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EU의 개발원조는 수원국들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작은 특징이 있다. 또한 유럽국가는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문제

18)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KIEP 참조

EU 기업들의 대북 투자 가능 분야 예시

분 야	세부분야	비 고
발 전 설 비	개선, 현대화	- ABB사, Wartsila사 등이 추진한 사례가 있음
철 도 운 송 시 스 템	개선, 현대화	- 지멘스 등이 추진한 사례가 있음 - 2006년 6월 오스트리아경제 사절단의 방북시 F.J. Elsner Trading사가 북한 철도청과 철도 레일의 납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함
소 프 트 웨 어 개 발	음성/지문 인식, 암호화 분야 등	- 독일 F.A.S.T사가 추진한 사례가 있음
광 물 자 원 개 발	아연광, 마그네사이트, 철광 등	-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에 관심있는 외국기업 다수
위 탁 가 공	의류, 신발, 단순조립형 전자, 컴퓨터 부품, 애니메이션 제작 등	- 유럽 내 중고 또는 유희설비 제공을 통한 위탁 가공 가능 -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려는 외국 기업 다수

자료: 북-EU의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 김삼식, KOTRA, 2001. 11. 21 참조

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EU국가들이 제공하는 양허적 조건의 개발 지원금은 정치적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북한은 정치적 부담과 채무상환의 구속이 적은 유럽의 개발자금을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에너지, 통신, 운송과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에 향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EU가 CSP와 NIP에 바탕을 둔 지원을 실시하게 되면, 북한 산업 회생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고, 이는 북한과 EU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EU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의 산업이 재가

동되면서 북한의 수출 여력을 증대시킬 것이고, 수출여건이 여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EU 지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북핵 사태의 해결로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당장 북한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²⁰⁾ 반면, EU는 섬유류 제품에 대해 쿼터를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외에는 북한에 대해 별도의 차별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로부터 GSP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북한산과 우리나라 제품간 적용되는 관세율은 차이가 없는 것이다. 또한 EU는 모든 북한

19) 북한·EU 경제관계의 확대 현황과 향후 전망, 이종운, KIEP 세계경제 2004. 3 참조

20) EU의 경우 협정관세율이 최고 14%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 북한산에 적용되는 Column2 관세율이 최고 90%에 이른다.

산 공산품 수출에 대해 정상무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 대우를 해주고 있어 미국과 일본에 비하면 북한산 제품이라도 진입에 큰 장벽은 없다. 한편, 지난 2000년 작성된 EU의 “2001~2004년 EU의 북한 Country Strategy”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 교역 여건이 호전되면 북한에 대해 GSP 혜택 부여를 검토할 수 있다(may)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 여건이 호전되면 오히려 북한산 제품은 GSP혜택을 받아 더욱 우호적인 여건 하에서 수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핵 사태 해결에 따른 북한의 대외 교역 증대는 EU 시장에서 먼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산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시장 선점 효과와 저렴한 인건비를 노리는 EU 기업의 대북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EU 기업의 투자는 북한에 자본 생산 설비, 선진 기술 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 북한의 산업 가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북한-EU간 임가공 계약이 늘어나면서 양 지역간 교역의 증대를 가져오는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EU는 북한의 제3대 교역 파트너이다. 북한과 EU간의 교역 증대는 북한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다.

EU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북한-EU간 교역 품목 구조, 양자간 경제 사절단 교류 시 협의 내용, 유럽 기업의 진

출 움직임 등을 종합해 작성해 본 것이다.

북한에 대한 EU 기업의 투자는 우선 대규모 자본이나 고도기술 없이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위탁가공 생산 분야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류 위탁 가공 생산에 대한 계약은 이미 여러 국가들과 이루어진 바 있으며, 범용 전기·전자 제품, 컴퓨터 부품에 대한 위탁 생산도 진행된 사례가 있어 EU 기업의 대북 투자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이다. 인프라 건설, 공장 신설 등과 같이 큰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은 단기간에 기대하기 힘들 것이나, 기존 설비의 개선, 현대화를 위한 소규모 투자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북한이 음성, 지문인식, 암호화 등의 분야에서 기술 수준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EU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U와 북한간의 경제 관계 확대는 그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북한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와 우호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높은 인건비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우리나라 및 주변국 기업의 대북 위탁가공이나 직접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섬유나 신발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면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럴 경우, 현재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으로 개성공단 입주에 망설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행에 대한 결심을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해외 기업의 개성공단 입수도 증가해 개성공단 개발에 활기를 더할 것이다.

그러나 EU가 CSP와 NIP에 명시되어 기술 지원을 시행하는 것, 지원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 그리고 북한-EU 간 교역 증대, EU 기업의 대북 투자 등 모든 것에 대한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이 이번 2·13 합의 결과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EU의 대북 지원의 규모와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또한 EU 기업들의 대북 투자는 북한의 인프라 개선, 자본주의 요소 이식 등 북한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유무와 성과가 달라질 것이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 했다. 이번 북핵 사태의 해결로 북한이 경제적 보상을 얼마나 얻어내느냐 하는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맞장구를 잘 치느냐가 절반의 변수라는 것이다.

V. 정책적 제언

북핵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북한의 대외 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시그널의 단초는 미국이 쥐고 있지만, 북한 경제의 실질적인 영향은 EU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에 비해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어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북핵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온 EU는 지원의 강도와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U의 기술원조는 북한 경제 회복에 토대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토대는 EU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의 확대에 이어질 것이다. 북한과 EU의 경제 관계 확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자본과 선진기술의 도입이 절실한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투자 위험도가 높고 인프라가 미비한 국가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내부적인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종 인프라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²¹⁾ 그렇다고 북한은 너무 조바심을 내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양 지역의 경제사절단 교환 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북

2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복구 및 산업설비의 확충에 유럽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외국투자자에게 장기 소유권 및 사업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KIEP

한은 대외무역 확대와 외자유치라는 단기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EU는 시장조사, 사업기회 발굴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있어 양자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우선목표와 중장기목표를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EU와 북한 간 경제 관계 확대는 북한의 대외 개방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공간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지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U 기업들이 느끼는 대북한 투자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기업과의 대북 공동 진출을 제안하는 것도 지원 방법 중 하나이다. 대북 정책에 관해 우리나라는 EU와 정책을 조율하고, 한-EU간 협력을 정례화, 제도화해 나간다면 북한에게 경제적 지원의 확대 및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안정적 확대와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미일 공조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DG for HUMANITARIAN AID - ECHO FINANCIAL REPORT 2006, EUROPEAN COMMISSION, 2007
- KREI 북한농업동향 제8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
- 이상민, 2005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6. 6
- 이상민,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KOTRA, 2006. 3
- 배종렬, 북한의 외자도입 현황과 과제, 수은 북한경제 2005 겨울호, 수출입은행, 2006. 1
- 조명철 외, 북핵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2005. 12
- 조명철 외, 개성공단 진출기업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방안, KIEP, 2005. 12
- 박홍규, EU의 동아시아 전략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원, 2005. 1
- 이종운, 북한·EU 경제 관계의 확대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2004. 3
- Axel Berkofsky, EU's Policy Toward the DPRK-Engagement or Standstill, European Institute for Asian Studies, 2003. 8
- 윤덕룡, 북-EU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KIEP, 2001. 12
- 김삼식, 북-EU의 경제교류 현황 및 향후 전망, KOTRA, 2001. 11
- 정원준, 북한-EU 경제교류 현황 및 전망, KOTRA 2001
- 박홍규, EU의 대북한 수교-동향과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1. 3
- 정원준, 북한-EU 경제교류 현황 및 전망, KOTRA, 2000. 2